

헌법

1. 다음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발의한다.
- ②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다음 국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②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국적법」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귀화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가할 수 있는 반면, 국적회복허가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④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3. 다음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된다.
- ②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바,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있다.
- ③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 등을 통해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 ④ 민주주의원리의 한 내용인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4. 다음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매운동의 목표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유통 구조, 안전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
- ②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③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5. 다음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향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 ② 1년 이상의 징역 형의 선고로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다.
- ④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다.

6. 다음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을 부득이 공직에서 배제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인 바, 여기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④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된다.

7. 다음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근로의 권리 중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 ③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후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8. 다음 기본권의 효력과 갈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인(私人)에 의한 평등권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 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종립학교가 특정 종교의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 ③ 일반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음식점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음식점 이용자의 흡연권이 동시에 제한된다면, 이는 기본권의 경합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흡연권과 혐연권의 관계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9. 다음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수사기관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공인이 아닌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④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부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부녀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10. 다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夫)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로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조항은 부(夫)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한다.
- ②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로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을 규정한 「민법」 조항은 인지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③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재판 피고인인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 ④ 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1. 다음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범적 의미는 ‘법 적용의 평등’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입법자에 대해서도 그가 입법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분배함에 있어서 적용할 가치평가의 기준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 제정의 평등’을 포함한다.
- ②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적도인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 ③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과학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12. 다음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노역장유치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에 불과하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②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③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한다.
- ④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에서도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13.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③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형사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된다.
- ④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14. 다음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선박안전법」 중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금지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중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다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터넷회선 감청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려는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외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한다.
- ②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국가가 경찰공무원에 대해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적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설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 ④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16. 다음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종교의 자유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적용의 면제 등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된다.
- ③ 연 2회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 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하여 특정 종교의 교인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관한 교리를 위반하도록 하거나 토요일 응시에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전파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

17. 다음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조항은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자동차의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일정한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직업결정의 자유는 직업행사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어서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 ④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지만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으로 인해 직업의 자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18. 다음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되고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③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국가배상법」은 동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다음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②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③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므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④ 헌법상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20. 다음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쟁의행위는 업무의 저해라는 속성상 그 자체 시민형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 ②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
- ③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조항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 ④ 헌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